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



# 오늘의 주요기사

















조간 (2016.06.13)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인천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실 홍보팀



-  006 "市 SPC "...
-  016
-  013
-  011
-  009 8
-  002 市
-  001 LNG ...
-  003 市 ... 8
-  004 ' '
-  009 - ,
-  i03 ' ' ... vs ' '
-  011
-  i01 中 ... ..
-  001 5
-  003 中
-  001 , 3

# “市 설립 SPC 방만운영”... 날세운 시의회

임금 체계 등 관리·감독 사각  
낙하산 인사들 역대 연봉도

유제홍 의원 “감사의뢰안 제정”  
불법자행 5곳 “檢 고발” 으름장

인천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들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이 걸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SPC 문제점을 지적했던 유제홍 시의원이 직접 불법행위를 자행한 5곳의 SPC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

혀 SPC들의 불법행위가 범위 심판대 위에 설 지도 주목된다. 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산하 도시공사가 출자한 13개의 SPC 중에서 대표자가 무보수로 일하는 4곳을 제외하고 9곳의 대표이사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1억4천2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오케이센터개발 1억3천500만원, 인천글로벌캠퍼 1억3천200만원, 미단시티개발 1억3천만원 등이다. 더욱이 직원 채용과 임금체계를 비롯한 회사운영 전반이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회사설립을 주도한 인천시나 도시공사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설립 이후 사업에 진전이 없고 자본잠식 상태인 인천로봇랜드 대표 연봉은 1억1천825만원이다. SPC 대표자리가 전문성 있는 인사보다 시장 측근이나 고위 공무원 출신에게 ‘낙하산’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해 회사 사정과 사업추진 성과와 관계없이 고액연봉만 챙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인천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는 SPC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불법·부당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는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사업부지 중 4만2천여㎡를 3~7년간 롯데건설과 한진중공업 측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특혜를 줬다.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도 이사회에서 의결한 공사비 557억원 결정을 무시하고 태영건설과 779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비를 222억원 더 챙겨줬다는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유제홍 시의원은 “SPC가 1년에 한번씩 시에 감사를 의뢰하게 하는 SPC 설치·운영 조례를 올해 하반기 제정하겠다”며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시의회 특위에서 조사하면서 언론에 공개된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수사요건이 성립되는데 사법당국의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진기자 khj@

## 중부일보

2016년 06월 13일 월요일 016면 해설

## 인천일보

2016년 06월 13일 월요일 013면 사람들

### 시의회 특위 후속조치 아쉽다

#### 조기정 인천 정치부

최근 종료된 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과 SPC 조사 특별위원회’의 후속조치가 아쉽다. 특위는 인천터미널 부지 등 재산매각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공론화 시키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과 인천글로벌캠퍼스(주) 등 시 유관기관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무분별한 운영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러나 형사고발 등 법적인 책임보다는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등으로 마무리 하면서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특위가 밝혀낸 조사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대표적인 예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다. 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연세대학교 인천 캠퍼스와 부속시설 등을 조성하는 송도복합단지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기업인 셈이다. 송도복합단지 임직원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유흥업소와 바(BAR), 호프집 등에서 한 달에 많게는 6천만 원까지 법인가



드를 사용했다. 또 박문여중·고에 각종 수십억 원의 특혜를 제공하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의회가 최근 인천도시공사와 진행한 감사에서도 ‘사진을 찍으면 안된다’고 답변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 내부에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특위의 조사 대상이었던 인천글로벌캠퍼스(주), 미단시티개발(주), 인천아트센터(주) 등도 다양한 문제가 불거졌다. 시의회는 이들을 형사 고발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커질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석상대. 아랫돌 빼서 윗돌 고고, 윗돌 빼서 아랫돌 고기라는 뜻으로 임기응변으로 어려운 일을 처리한다는 말이다. SPC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방편은 지양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 백석두 청소년단체협의회장 취임식

인천시청소년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인천YWCA 대강당에서 제8대 백석두 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윤상현·박남춘 국회의원,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등 각급 단체장과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석두 회장은 취임사에서 “인천지역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게 주어진 큰 옷에 맞는 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시청소년단체협의회 제8대 임원진은 취임 각오를 다지면서 인천지역 청소년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 “학교동아리 축제·해외교류 날개”

## 백석두 인천시청소년단체협의회장의 두가지 목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위해 힘쓰겠다.”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제8대 회장으로 백석두(60) (사)흥사단 인천지부장이 지난 10일 취임했다. 백 회장은 흥사단 인천지부장, 유네스코 한국 청소년 활동지도자협의회 회장 등 그간 다양한 청소년 지원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는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주자”라며 “글로벌 시대에 맞게 청소년이 큰 꿈을 갖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회장이 청소년을 위해 일하게 된 계기는 백 회장의 학창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중학생 시절 돌연 학업을 중단하고 전국 무전여행을 통해 만난 사람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터득했다고 한다. 백 회장은 “무전여행을 40일씩 두 차례 했는데, 마을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배려를 많이 받았다”며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청소년을 위해 일하며 그 은혜를 베풀고자 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임기동안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학교 각 동아리 축제를 확대하고, 청소년지도자 해외연수·교류 기회를 많이 만드는 일에 힘을 계획이다. 청소년 스스로 축제를 꾸리고 해외교류의 기회를 가지면서 큰 꿈을 품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백 회장은 “국가예산으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관내 기업, 사회단체, 청소년 단체가 협동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협의회의 역점사업이 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백 회장과 1년간 함께 일하게 된 임원진은 부회장 김말숙 인천YWCA 회장 ▲사무총장 홍현웅(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상임이사 ▲감사 남상인 인천YWCA 사무처장·이용찬(재)인천YMCA 청소년재단 사무국장이 구성됐다.

한편 취임식이 열린 지난 10일 인천 YWCA 대강당에는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 인천시교육청 이청연 교육감, 인천광역시 김명자 여성가족국장, 인천시의회 황흥구 의원, 윤상현·박남춘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급 단체장,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석두 회장은 마지막으로 “인천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고, 민족이나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행복을 위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글로벌 지도자’ 역량 육성  
지역 기업·단체 협력 강조  
“공동체 가치·행복 꿈꾸길”

백석두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신임 회장이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제공

## 도민일보

2016년 06월 13일 월요일 009면 인천

# 인천시 청소년단체 협의회 제8대 백석두 회장 취임

인천시 청소년단체 협의회 제8대 회장으로 백석두 회장 취임식이 인천 YWCA에서 열렸다.

인천청소년 단체협의회는 가천미추홀봉사단 등 17개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취임식에는 노경수

시의장 이청연 교육감 김명자 여성가족국장, 윤상현, 박남춘, 박준영 국회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백 회장은 취임사에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 실현

을 위해 인천청소년들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인천속의 세계, 세계속의 인천을 만들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희망과 꿈을 지닌 인천 청소년활동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 ‘市 행사 사고’ 세금으로 배상

## 판결따라 1억3000여만원 지급... 시의원 “공무원에 구상권 청구를”

인천시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때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사고 배상 책임으로 1억3000여만원의 시민혈세를 지출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법원이 인천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전 비행 준비가 부실했다고 판단했고, 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시는 지난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장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1억3431만7000원을 배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세계도시축전(2009년 8월7일~10월25일) 부대행사인 인천하늘축전이 열린 그해 9월27일 낮 12시50분쯤 경량항공기 3대가 편대를 이뤄 행사장 상공 시범비행 중 1대가 나래연에 걸려 추락, 함께 탔던 온 모(46)씨가 숨지고 조종사 김 모(44)씨가 중상을 입었다. 추락한 경량항공기는 전파됐었다.

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동 주최로 열렸던 이 행사 도중 경량비행기 안전용 2층 버스에 추락해 비행기 조종사와 관람객 등 모두 12명이 부상했다.

김 씨 등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시가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2014년 7월22일 1심 판결에서 “인천시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며 인천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시는 같은해 8월6일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2015년 5월 기각됐다. 시는 상고 여부를 검토했지만 상고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판결한 금액 및 이자를 포함해 김 씨에게 9620만4507원, 비행기 소유주인 김 모 씨에겐 3811만

3117원 등을 지난해 예비비로 지급했다.

시는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나래연 철거 문제에 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사고 전날 행사장 상공에 나래연이 있음을 인지했지만 사고 당일 나래연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사전 비행 준비가 부실했음을 인정했다.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은호(부평1)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 233회 제 1차 정례회 제 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덕 시 해양항공국장은 “2015년 항소 기각된 사건이어서 이제야 예비비 지출이 알려지게 됐다”며 “일반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사고여서 (담당공무원에 대한)구상권 청구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주영 기자 leeji96@incheonilbo.com

# 송도LNG야구장 매각...동호인들 설 곳 잃나

### 선점 경쟁 사용료 인상 우려

### 市 “대체구장 3곳 건설 예정”

인천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야구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용현·학익지구 유수지 부지와 청라GM대우 연구개발(R&D) 부지, 남동경기장 유희부지 등 3곳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 LNG야구장을 인천 도시공사에 조만간 매각하고, 대체 야

구장 3곳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LNG 야구장을 넘겨받을 도시공사는 향후 이 땅을 초저온물류단지 사업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예정이다.

LNG 야구장은 송도동 346번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들어선 야구장 5개 면과 연습장 1개 면, 주차장 등은 모두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야구장 운영도 향후 초저온물류단지 사업이 시작되면 곧바로 중단된다.

이 경기장은 야구 동호인들이 주말

마다 자주 찾던 곳이다. 한 동호인은 “주말에 한 팀에 20명씩 두 팀이 2시간 간격으로 경기를 하다보면 5개 경기장을 합해 하루 1000여명이 오갈 정도”라며 “없어지면 동호인들 사이에서 대란이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역 야구장이 대부분 불법인데 여기는 몇 안되는 합법적인 야구장”이라며 “여기가 없어지면 경기장을 선점하려는 경쟁 때문에 사용료가 오를까 걱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야구장 운영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3곳에 대체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곳당 야구장 2면 꼴이다. 하지만 부지 소유권과 인허가 문제, 주변 기관과의 협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의회도 지난 10일 안건 심사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과의 협의와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드시 대체 야구장을 반드시 만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며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대체야구장이 완성되기 전까지 동호인 야구 경기가 끊기지 않도록 지금의 야구장을 계속 쓰게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st@incheonilbo.com

# 市 항공과 신설 ... 8명 소박한 출발

“항공정비산업 등 업무 벅찰 듯” 지적... 시 “부족 판단되면 증원할 것”

인천시가 항공과를 신설한다. 기존 업무와 무인항공기 등 첨단 분야까지 8명 뿐인 신설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에는 벅차 보인다.

인천시는 7월부터 해양항공국 산하에 항공과를 신설해 운영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하고 항만공항정책과와 항만공항시설과를 항만과와 항공과로 나눴다.

항공과는 ▲공항기본계획 수립 및 공항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항공교통 대중화 및 항공노선 다양화 지원 ▲항공 물류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항공산업(드론산업 등) 활성화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지원 등을 담당한다.

그동안 인천시의회와 인천 안팎에서는 ‘항공’ 분야에 대한 시의 부서 독립을 요구했다. 기존 4명 뿐인 ‘팀’제로는 항공 업무 파악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첨단항공과를 신설하는 등 항공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을 확대했다.

항공과는 5명의 항공정책팀과 3명의 항공산업팀으로 ‘소박’하게 출발한다.

이들이 인천국제공항 3단계 관리와 4단계 준비를 시작으로 인천공항 지분 확보·명칭 문제와 대 국회와 중앙정부 설득 등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백령도 신공항 개발과 인천공항 소음대책 등의 현안과 국토부 공항정책과가 담당하는 제3연륙교 건설 지원도 측면에서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민선 6기 8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항공 분야를 비롯해 물류 처리 등도 진행 중이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항공정비산업은 물론 항공 산학연을 위해 8명으로 시작되는 신설 항공과로는 벅차 보인다”며 “적극적인 항공 행정을 위해 시가 신설 항공과에 더욱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설 항공과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해 증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영 기자 leeyj96@incheonilbo.com

## 인천일보

# 민경욱 ‘주민 민원 청취의 날’ 행사 문전성시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사진)이 마련한 첫 주민 민원 수렴 행사에 지역주민 50여명의 발길이 이어져 문전성시를 이뤘다.

민 의원은 지난 11일 연수구 송도동 지역사무소에서 등원 이후 처음으로 ‘제 1회 주민 민원 청취의 날’을 열었다.

최초로 시도된 주민 민원 청취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 50여명이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 2시간 동안 민 의원, 시의원, 구의원, 관계공무원 등과 상담했다.

민 의원은 “책상에 앉아 자료를 들춰보기보다는 직접 현장의 주민들 목소리와 고충을 살



피고 싶었다”며 “4년 임기동안 꾸준히 소통의 행보를 이어갈 요량”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앞으로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마다 주민 민원 청취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민 민원 청취 직전 열린 민 의원의 지역사무소 현판제막식엔 이재호 연수구청장, 정장일 시의원, 이강구·이인자 구의원,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 인천시-환경공단, 환경의 날 기념 행사 성료

## 환경 그림그리기,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 다채

인천시 주최, 인천환경공단 주관의 '환경을 부탁해' 행사가 9일 선학실내체육관에서 학생과 시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박승희 시의회 부의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인천지속발전협의회 박흥렬상임이사 등 2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하였으며, 전성수 부시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내외빈 축사, 환경유공자 15명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공식 기념행사에 이어 시민들

의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2016 환경을 부탁해!' 라는 주제 아래 '어린이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대회'와 중고생대상 '환경 골든벨', 환경우수사례발표 및 환경토론, 환경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한편, 공동주관기관인 연수구청은 행사에 참여한 내외빈, 연수구 어린이와 함께 미꾸라지 200kg를 방생하고 시민단체회원들과 승기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를 비롯한 국제위러브유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기후변화체험부스', '음식물발효체험',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사랑법', 심폐소생술 등 20여개의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환경골든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양한 체험부스와 환경상식을 익힐 수 있는 환경 골든벨 행사가 이어져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환경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진희 기자

# 서구 '봉화초' 폐교... 신중론 vs 시급론 '팽팽'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구도심지역 학교의 신도심 이전 재배치 계획(본보 5월 17일자 3면)이 시의회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가 학교 이전재배치 심사를 보류할 가능성이 커 신설학교 개교 지연에 따른 학생 피해도 우려된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적정으로 승인된 서구청라지구 경연초등학교, 남동구 서창3초등학교 건립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 학교 건립을 위해 폐교하기로 한 서구 및 남구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박승희 시의원(새누리·서구4)은 전북과 강원도 사례를 들며 서구 봉화초등학

박승희 시의원 "지역발전 악재" 시교육청 "이전 재배치 불가피" 행정절차 지연엔 도미노 피해

교 폐교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학교이전은 지역발전의 추이와 도시개발계획 진행 등 다양한 사항을 살펴보고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며 "봉화초등학교 폐교방침에 좌좌동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이 이어진 만큼 시교육청은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승철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 관련 예산과 교원배치는 학생수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설사 학교를 신설하더라도 예산과 교원이 배정되

지 않는다"며 "학생 수가 늘어나는 신도심지역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이전재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정책적으로 많은 사항을 고려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 폐교 후 신설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오는 2019년 개교해야 할 청라 및 서창지구 신설학교 착공이 지연되면 이들 지역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적정규모 학교 유지를 위한 학교 이전재배치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다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 강화 불은면 난타 강좌·동아리 첫선

인천 강화군 불은면 주민자치센터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난타 강좌를 개강하고, 난타동아리 출범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난타는 한국의 전통 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퍼포먼스로,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 일반인들의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난타 수업은 매주 목요일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며,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강습을 받을 수 있다.

난타동아리 출범식에는 이상복 군수, 안영수 인



천시 의원, 고승민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 한강 하구까지 올라온 中어선

# 무력단속 쉽지않고... 대책 '답답'

연평도 북측 앞바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어선 30여척이 아슬아슬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자 해군과 인천해경이 중형함정과 고속단정, 방탄보트 등을 투입해 경고 사이렌을 울리며 경계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어선들은 북쪽으로 달아나기는커녕 NLL에 일렬로 늘어진 채 해군과 해경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했다. NLL을 넘어오지만 앓을 뿐이다. 요란하게 경고 사이렌을 울리던 해군·해경도 중국어선들의 NLL 줄타기에 속수무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연평도의 한 어민은 “해경이 하루에 한 두 번씩 정기적으로 순찰이나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저렇게 대처만 하다가 돌아오는 일이 많다”면서 “아무리 사이렌을 울려도 (중국어선은) 꾀죽도 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인천해경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고자 연평도 인근 해역에 중형함정 1척, 특공대 방탄보트 2척, 고속단정 1척, 특공대 16명, 해상특수기동대 6명 등 24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4시40개는 연평도 남

서쪽 50km에서 NLL을 8.6km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50t급)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하기도 했다. 인천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26척을 나포하고 2천340척을 퇴거했다. 그러나 중국어선들은 매일 300여 척이 넘게 반복적으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립수역인 강화군 교동도 서남쪽 해역까지 밀고 내려와 꽃게와 어

### 민정경찰 공동단속 시작했지만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 다시 침투 사태 날로 악화 뾰족한 대책없어 정부는 “더 강하게 대응할 것”

패류 등을 싸취어하고 있다.

강화 인근 해상에 중국어선이 나타난 것은 지난 2014년까지 연 2~3회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20회, 올해는 5월 기준으로 500회가 넘는 지경이다. 연평해역 어획량이 줄어들자 한강하구까지 들어온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군과 해경, 유엔군 사령부가 민정경찰을 구성해 지난 10일

부터 고속단정 4척을 투입, 공동 단속을 벌였다. 하지만, 중국어선은 여전히 인근 해역에 머물고 있다. 언제든 기회만 생기면 다시 밀고 들어올 모양새다.

더욱이 중립수역에서의 단속은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무력 단속은 쉽지가 않다. 민정경찰 측도 경고방송으로 중국어선을 내쫓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태가 날로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 등은 뾰족한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0일 중앙대 특별강연에서 “한중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갈등과 싸움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중어업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서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 주변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학배 해양부 차관도 같은 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안전처,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과 어업인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윤 차

관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태원 연평어촌계장은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외교적으로 한중어업협정을 더 강화하고, 단속 체계도 중국어선 우리 해역을 넘어오면 쫓아내는 사후처방식이 아니라 아예 우리 해역 근처로 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는 상시 단속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 ‘서해5도 지원’ 공감확인 어민 의견 반영 관심집중

해수부, 중앙부처 합동회의  
여객선 준공영제 운영 추가  
주민 건의 사항 “긍정 검토”  
참석자 지원예산 적극 반영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따른 서해 5도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부처 합동 회의가 시작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중회의실에서 윤학배 차관 주재로 서해 5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국민안전처, 인천시, 웅진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대상이었던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는 웅진군이 연평도 어민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발표한 뒤 관계 부처가 향후 계획이나 입장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첫 회의라서 건의사항 수용 여부 등 서해 5도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못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늘(10일)은 웅진군의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자리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었다”며 “몇 번 더 만나서 지원 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 5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크게 ▲중국어선 단속 강화 ▲조업여건 개선 ▲어업인 지원 ▲수산자원 조성 ▲해상교통 여건 개선 등 5가지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인력·시설을 확충해 줄 것과 경제적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해 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여기에 서해 5도 현안이자 숙원사업인 여객선 준공영제 운영, 백령도 출발 여객선 운영비 지원 등 해상교통 여건 개선 요구를 추가했다. | 관련기사 3면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관계자들은 서해 5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웅진군이 전했다. 웅진군 관계자는 “건의사항 발표 후 토론이 있었는데, 대부분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서해 5도 건의사항과 관련해 올해 지원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 올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업 구역·시간을 확대해달라는 건의사항은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일단 정리됐다. 해상교통 여건 개선 요구에 대해선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따른) 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각 부처에서 예산 지원 의지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사업 신설과 제도 개선이 금방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웅진군에 따르면 서해 5도 꽃게잡이 어선은 164척으로, 약 820명(선원 수)이 이 일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 4~5월 꽃게 어획량은 5만1천600kg으로, 전년 같은 기간(14만9천995kg)보다 65.6% 줄었다. 가격으로 계산하면 77.7%(21억6천470만원→16억8천127만원)나 줄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꽃게 어획량 감소 원인 중 하나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꼽고 있다.

/목동훈·김민재기자 mok@kyeongin.com

# 중어선 단속강화·피해보상·교통개선 “불법조업 막아달라”

서해5도 주민 정부건의, 내용은 해역전담 경비부서 설치 급선무

인천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이 용진군을 통해 지난 10일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은 5개 분야 13건이다. 서해 5도 해역 전담 경비부서 신설 및 단속세력 확충, 불법조업 방지 시설 설치비 증액, 서해 5도 조업구역 확장, 서해 5도 주민 특별지원 근거 마련(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 표 참조

방지사설·어업지도선 국비보조

어장면적·조업시간 확대 요구

지원근거 마련 특별법 개정도

### 서해 5도 주민 건의사항

분야	건의사항
중국어선 단속 강화	서해 5도 중국어선 단속 강화
조업 여건 개선	NLL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확대 서해 5도 조업구역 확장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국비 지원 연평어장 아간조업 확대
어업인 지원	수산물 산지가공·유통사업 지원 서해 5도 주민 특별지원 근거 마련
수산자원 조성	연안미디어장 조성사업 추진 수산자원 조성비 추가 지원
해상교통 여건 개선	여객선 준공영제 운영 백령 출발 여객선 운영비 지원 여객선 운항관리업무 해경 이관 여객선 승선 신분 확인 절차 완화

용진군은 이날 해수부 차관 주재로 열린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 및 안전조업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서 서해 5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은 '중국어선 단속 강화' '경제적 피해 직간접적 보상 추진' '해상교통 여건 개선'으로 요약된다.

서해 5도 어민들은 서해 5도 해역전담 경비 부서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력·장비 확충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백령·대청어장을 2천394㎞→2천554㎞로 넓혀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연평어장 조업시간을 '일출 1시간 전~일몰 후 2시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해 5도는 기상악화와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은 데다, 다른 어장과 달리 야간 조업이 금지돼 있다는 게 어민들의 불만이다.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역에서 활개를 치며 어족자원을 씹어먹고 있는데, 정작 우리 어민들은 한정된 어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도 있다.

'서해 5도 주민 특별지원 근거 마련' 건의는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특별법에 '남북간정에 따른 조업통제 등으로 조업시설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다.

해상교통여건 개선분야의 건의사항 중 관심을 끄는 건 '여객선 준공영제 운영'이다. 주민들은 수익성이 낮은 항로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범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여객선 운임이 버스 및 지하철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과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무소속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어민 피해 보상과 여객선 준공영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목동훈·김민재기자 mok@kyeongin.com

## 기호일보

# 승기하수처리장, 제3의 부지 찾아 재건설 방안 거론

현재 위치에 지하화는 사업비 부담 남동유수지 이전 계획은 주민 반발 시 “사용 지자체와 대안 협의할 것”

승기하수처리장 이전부지로 남동유수지가 아닌 제3의 장소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승기하수처리장' 이전·재건설을 위해 남동유수지 이전 설치 카드를 꺼냈지만 이마저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주민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는 최근 마무리된 주민간담회와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 온 승기하수처리장 이전·재건설 타당성 용역을 이달까지 마무리한 뒤 다음 달 대책을 확정 짓기로 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 방류수질 기준도 맞추지 못하고 처리용량도 한계에 달해 이전·재건설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현 위치에 지하화하는 등 재건설 계획을 세웠으나 3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 투입 등에 가로막혀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남동유수지 건설안을 대안으로 추진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법을 찾고자 11차례에 걸쳐 시민간담회를 가졌으나 반대가 거세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당초 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설 하수처리장은 현 부지 또는 남동유수지 등 어느 부지에 건설하든 지하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화할 경우 상부

구간은 상업시설 조성 없이 시민 쉼터나 체육부지 등 시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정안에도 남동구와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남동유수지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승기하수처리장이나 남동유수지가 아닌 제3의 지역에 이전·재건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그동안 제기된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제3의 장소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승기하수처리장의 경우 연수구와 남동구, 남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만큼 3개 지자체와 공동 협상을 통해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해석이 힘이 실린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승기하수처리장을 사용하는 3개 지자체와 향후 대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며 “기존 부지나 남동유수지를 포함해 제3의 부지까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ijh@kihoilbo.co.kr